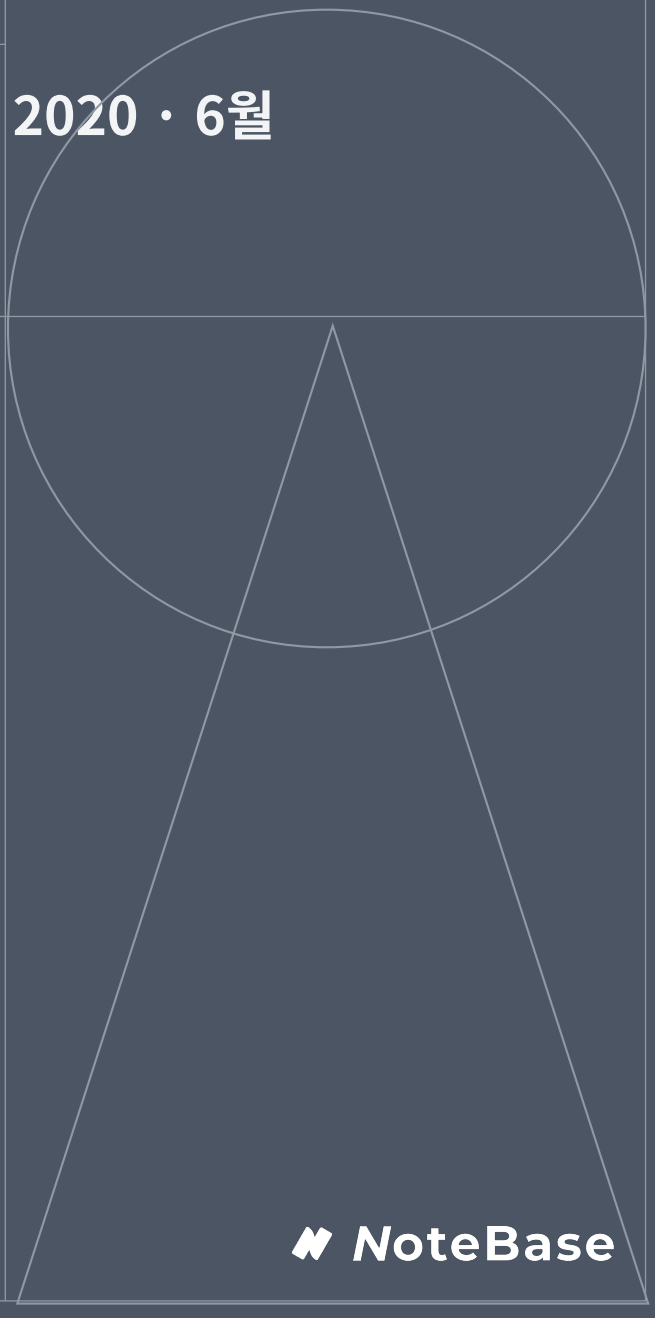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0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0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0 · 6월

문 1.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환경부에서 ㉠멸종 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한 열목어는 연어과의 민물고기로 ㉡산란기가 되면 온몸이 짙은 홍색으로 변한다. 열목어 개체 수가 급감하자 여러 기관에서는 인공 증식한 열목어를 방류하는 등 ㉢열목어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 ㉢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④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몸 색깔 변화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자연 현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반면 ㉠의 보호 대상 지정은 인간의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 사회·문화 현상으로,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의 멸종 위기 야생 생물 지정과 ㉢의 복원 사업 추진은 생물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의도와 가치 판단이 개입하므로 사회·문화 현상이다. ㉡의 산란기 몸 색깔 변화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이므로 자연 현상이다.

① X: ㉠과 ㉢은 모두 생물 보호가 바람직하다는 가치 판단을 반영하므로 **가치함축적**이다. 몰가치적인 것은 ㉡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현상 자체에 인간의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이 개입하지 않는다.

② O: ㉡과 같은 자연 현상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반면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일정한 경향은 나타나지만 예외가 있는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X: ㉡과 같은 자연 현상도 일정한 원인에 따라 현상이 발생한다는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존재 법칙을 ㉢만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사회·문화 현상에는 실제로 나타나는 인과 관계뿐 아니라 '생물을 보호해야 한다'와 같은 당위 법칙도 작용한다.

④ X: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은 ㉠뿐 아니라 **㉢에도 해당**한다. 사회·문화 현상에는 여러 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보편성과 시대·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수성이 함께 있다. 자연 현상인 ㉡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보편성을 띤다.

NoteBase

문 2.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

②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③ 명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 - 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되었다면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행위 당시 처벌 규정이 없었다면** 나중에 만들어진 처벌 규정을 과거 행위에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문서로 제정된 법률인 성문법에 범죄와 형벌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회에서 오래 지켜 온 관행이 법으로 인정되더라도, **관습법만을 근거로 범죄를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② O: 유추 해석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그와 비슷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명시적인 처벌 근거 없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면 국민이 처벌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은 금지된다.

③ O: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에 **범죄의 내용과 형벌의 종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민이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④ X: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 당시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이후 처벌 규정이 제정되어도 그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3. <보기>의 밑줄 친 「헌법」상 기본권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보기>
갑(甲)은 과거 시민단체에서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는데, 국가기관이 갑(甲)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정당 및 사회활동, 대인접촉 관계, 집회 또는 시위 참가 활동 내역 등을 수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A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갑(甲)은 B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근교로 이사를 갔지만 주변 공장으로 인한 환경 공해와 자동차 행상들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공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 C 역시 침해 받고 있다.

① A는 소극적·열거적 성격의 권리이다.

②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③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④ A는 B와 C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청구권은 국가에 재판이나 피해 구제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여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는 **절차적 권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A는 국가의 사생활 정보 수집과 관련된 자유권, B는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권, C는 환경·소음 공해와 관련된 사회권이다.

① X: A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해당한다(헌법 제17조). 자유권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권리이지만, 헌법에 적힌 권리만 보장되는 열거적 권리는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보호하므로 **포괄적 성격**을 가진다.

② O: B는 청구권이다. 갑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행위이다. 재판청구권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권은 이처럼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절차적 권리**이다.

③ X: C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으로, 사회권에 속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공장 공해와 확성기 소음은 이러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사례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민주주의의 이념인 평등을 구현하며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은 **평등권**이다.

④ X: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A인 자유권이 아니라 **B인 청구권**이다. 자유권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자체를 보장하고, 청구권은 소송 등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자유권과 사회권 등 다른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NoteBase

문 4. <보기>의 (가), (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뛰어난 직원도 지금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조직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① (가)는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② (나)는 사회 명목론이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사회의 독자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므로 **개인의 노력과 개선**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명목론의 관점이다. 반면 (나)는 개인의 성과를 좌우하는 **조직 문화의 개선**을 강조하는 사회 실재론의 관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배치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므로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 사회 명목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며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에 붙인 이름이라고 본다. (나)는 뛰어난 개인도 조직 문화에 따라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보므로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 독자적 특성을 가지며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① X: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로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인 (나)**이다. (가)는 개인과 별개로 존재하는 사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역할을 중시한다.

② X: (나)는 사회 명목론이 아니라 **사회 실재론**이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은 사회적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③ O: (가)는 사회 현상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과 행동에서 찾으므로 **개인의 노력과 의식 개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해 성과를 높이려는 주장도 이 관점에 해당한다. 반면 (나)는 개인의 변화보다 조직 문화와 같은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을 중시한다.

④ X: 사회의 독자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나)가 아니라 **사회 명목론인 (가)**이다. (나)는 조직 문화가 개인의 능력 발휘를 제약한다고 보므로 개인의 특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회의 독자적 특성을 인정한다.

NoteBase

문 5.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관료제는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강조한다.

②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③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④ 탈관료제는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관료제는 업무를 세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기는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관료제는 조직의 업무를 세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에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는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강조한다. 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숙련되도록 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② X: 근무 기간이나 경력이 쌓인 순서인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은 관료제에서 중시하는 방식이다. 탈관료제는 연공서열보다 **개인의 능력과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여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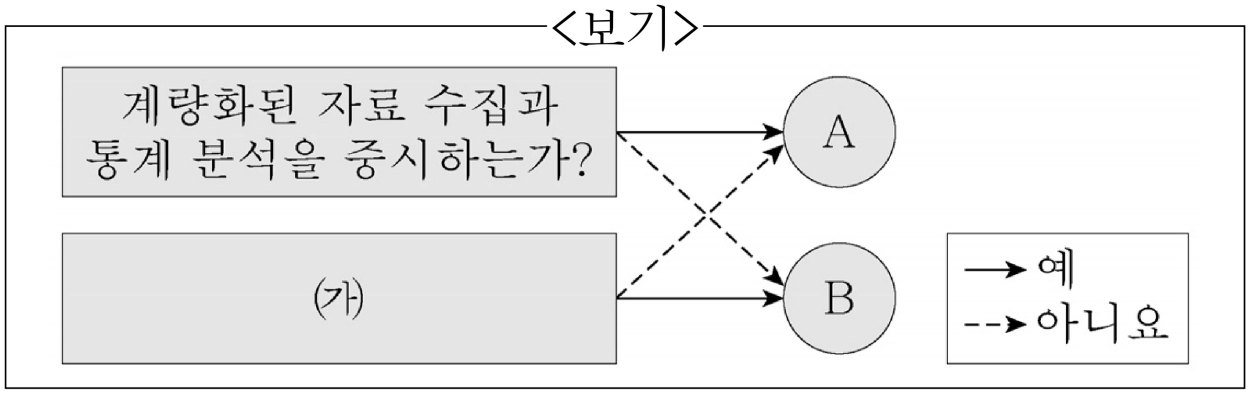
③ X: 조직 운영의 효율성은 **관료제와 탈관료제가 모두 추구**한다. 관료제는 분업과 정해진 규칙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탈관료제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업무 수행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려 한다. 효율성 추구 자체가 두 조직 형태의 차이는 아니다.

④ X: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탈관료제는 획일적인 절차보다 상황에 맞는 유연한 업무 처리와 구성원의 자율적인 판단을 중시한다.

NoteBase

문 6. <보기>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A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강조한다.

② B는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③ A는 방법론적 일원론,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④ (가)에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계량화된 자료와 통계 분석을 중시하는 A는 양적 연구이고, B는 질적 연구이다. 양적 연구는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질적 연구는 인간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도식의 실선은 '예', 점선은 '아니요'를 뜻한다. '계량화된 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을 중시하는가?'에 '예'로 연결된 A는 양적 연구, '아니요'로 연결된 B는 질적 연구이다. (가)는 B에는 해당하고 A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징을 묻는 질문이어야 한다.

① X: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질적 연구인 B**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하여 행위에 담긴 주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A는 자료를 수량화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② X: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양적 연구인 A**이다. 양적 연구는 측정한 자료를 분석하여 현상 사이의 규칙성을 찾고 이를 일반화하려 한다. B는 개별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③ O: A는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에서 객관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다. B는 사회·문화 현상에는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개입하므로 자연 현상과 구별되는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④ X: 경험적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서 이루어진다. 질적 연구도 면접이나 참여 관찰 등으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므로, 이 질문으로 두 방법을 구분할 수 없다. (가)에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중시하는가?'와 같이 B에만 '예'로 연결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NoteBase

문 7. <보기>의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甲), 을(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갑(甲): 자연 상태는 강제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일종의 전쟁 상태이고,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의 위험에 처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좀 더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 사회를 만든다.
· 을(乙): 사람들이 계약에 따라 사회를 이룩한 것은 자연 상태에 대한 절망에서가 아니라 불편함 때문이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 데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절차를 밟아 통치자를 세우는 데 동의하고, 또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위임하는 동시에 자연권의 보호를 맡긴다.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는 동의와 신탁 위에서만 성립한다.

① 갑(甲)은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② 을(乙)은 국가 권력은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분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갑(甲)과 달리 을(乙)은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

④ 갑(甲), 을(乙)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을인 로크는 정부가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도록 권력을 맡았다고 본다. 권력을 맡은 자가 사익을 위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을 막으려면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갑은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보고 강력한 주권 권력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려는 홉스이다. 을은 자연 상태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데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권력을 맡긴다는 로크이다. 특히 '동의와 신탁'은 통치자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탁받았다는 뜻이다.

① X: 홉스에게 국가를 세우는 사회 계약은 개인들 상호 간의 계약이며, 주권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주권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의 자연권을 침해하여 신탁을 위반하면 국민이 저항하고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로크이다.

② O: 로크는 국민이 정부에 권력을 맡긴 목적을 생명·자유·재산 등 자연권의 보호에서 찾는다. 법을 만드는 자가 집행권까지 가지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거나 그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으므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③ X: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사상가는 루소**이다. 일반의지는 공동체 전체의 공공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로, 루소는 주권을 이러한 일반의지의 행사로 본다. 을인 로크는 국민의 동의와 신탁을 바탕으로 자연권을 보호하는 정부를 강조한다.

④ X: 홉스와 로크는 모두 국가 자체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지 않고 **개인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본다. 홉스에게 국가는 전쟁 상태를 벗어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로크에게 국가는 생명·자유·재산 등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NoteBase

문 8. <보기>의 밑줄 친 ㉠~㉣ 중 혼인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혼인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진다. 「민법」은 혼인하였더라도 ㉠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관리·처분하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 일상의 가사에 대해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다. ㉣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으로 각자의 몫이라고 단정한 점이 잘못이다. 이러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부부 별산제는 혼인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하고 관리·처분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830조 제1항과 제831조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이며,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 **혼인만으로 모든 재산이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X: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으로 각자의 몫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하도록 한다. 이때 혼인 중 명의에 따른 법률상 소유관계와 이혼 시 공동 형성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 O: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에게 **일상의 가사에 관한 상호 대리권**을 인정한다.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구입처럼 통상적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거래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을 대리할 수 있다. 혼인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상 거래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O: 민법 제832조에 따라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거래하여 생긴 채무는 다른 쪽도 연대책임을 진다. 연대책임이란 채권자가 어느 한쪽에게도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미리 다른 배우자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지의 '별도의 의사 표시'는 이러한 책임 배제의 의사 표시를 뜻한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인 ㉡을 가리키는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9. <보기>의 밑줄 친 ㉠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보기>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헌법의 목적은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정치가나 관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어떤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그 법안이 헌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함부로 헌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헌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정되는 것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① 탄핵 심판
② 권한 쟁의 심판
③ 위헌 법률 심판
④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국회가 만든 법률도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가 **위헌 법률 심판**이다.

공통 해설

㉠은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의 규범이므로 국회의 입법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칙을 보장하는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여 위헌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심사의 대상과 기준이 각각 법률과 헌법이라는 점이 제시된 제도를 식별하는 기준이다.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재판의 전제'란 해당 법률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이나 법률적 의미 등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며,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제정된 법률에 대한 사후 심사**이므로, ㉠의 '먼저 확인'을 법안 통과 전에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문 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 발표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보기>
사회자: 노동 관련법 위반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甲):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임금을 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매출이 많을 때 주다 보니 임금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
· 을(乙): 제대 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합니다. 일이 많아서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합니다.
· 병(丙):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자라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 정(丁):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경영 계획에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단체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① 갑(甲)
② 을(乙)
③ 병(丙)
④ 정(丁)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丁)이 요구한 것은 임금·근로시간의 조정이 아니라 **사업 확장이라는 경영 계획 자체**에 관한 교섭이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회사에 의무적으로 교섭에 응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 거절을 곧바로 노동 관련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갑(甲): 임금의 정기 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례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매출이 많을 때만 지급하여 3개월분을 한꺼번에 주는 방식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 원칙에 어긋난다.

을(乙): 주휴일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을에게 일이 많다는 이유로 휴일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이 의무에 어긋난다.

병(丙): 해고에서의 성차별 금지에 위반한 사례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다. 회사 경영이 어렵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丁):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로 보기 어렵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의무적 교섭 사항에 관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업 확장 계획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 그 실행으로 고용이나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변동이 예상된다면 관련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례에는 그러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노동 관련법 위반과 관련한 피해 사례로 보기 가장 어려운 발표는 정(丁)의 발표이며,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가)와 (나)가 각각 나타내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생계, 의료 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나)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① (가)가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나)가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③ (가)가 속한 유형은 (나)가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나)가 속한 유형은 (가)가 속한 유형과 달리 수혜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나)의 사회 보험은 노령·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해 미리 보험료를 모으고, 위험이 발생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생활이 어려워진 뒤 지원하는 공공 부조와 비교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로, 공공 부조에 속한다. (나)는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마련한 기금으로 노령·사망·장애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국민연금으로, 사회 보험에 속한다.

① X: 공공 부조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필요에 따라 현물이나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상담·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이다.

② O: 사회 보험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를 모아 대비하고, 위험이 발생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따라서 이미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을 지원하는 공공 부조보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이는 노령·장애 자체를 막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한다는 뜻이다.

③ X: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모두**에서 나타난다. 공공 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소득 격차를 줄인다. 사회 보험도 보험료 부담과 급여 지급 구조를 통해 소득 계층 간이나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④ X: 사회 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수혜 정도가 아니라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된다. 국민연금에서도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므로, 받을 급여의 크기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공공 부조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조세로 비용을 부담하며, 수혜자에게 급여의 대가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사회자: 현재 경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갑: ㉠ 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 을: ㉡ 지급 준비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① ㉠은 금융 정책에 해당한다.
② ㉠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
③ ㉡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한다.
④ ㉠과 ㉡ 모두 총수요 감소 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소득세율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줄이고, 지급 준비율 인상은 은행의 대출과 통화 공급을 줄인다. 두 정책 모두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총수요 감소 정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 소득세율 인상은 정부가 조세를 조절하는 **재정 정책**이다. 금융 정책은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 등의 수단으로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므로 ㉡이 이에 해당한다.

② X: 가처분 소득은 가계가 세금 등을 내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소득세율이 오르면 납부할 소득세가 늘어나므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한다**. 이에 따라 소비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X: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받은 예금 중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이를 인상하면 은행이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고 예금 통화를 만들어 내는 신용 창조가 위축되므로, 통화량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④ O: 총수요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등 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합한 것이다. ㉠은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비를 감소**시키고, ㉡은 대출과 통화 공급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킨다. 따라서 두 정책 모두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 정책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3. <보기>는 금융상품 A~C를 질문을 통해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보기>

질문	A	B	C
만기가 있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가)	예	예	아니요

① A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② B의 발행 기관은 B를 발행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③ B와 달리 C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④ (가)에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B와 달리'가 잘못되었다. B인 채권과 C인 주식은 모두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만기가 있는 B는 채권이고,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C는 주식이다. 나머지 A는 만기가 없고 배당 수익이 없는 요구불 예금이다.

① O: A는 요구불 예금으로,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을 금융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법정 보호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호받는다.

② O: B는 채권으로, 발행 기관이 투자자에게 돈을 빌렸음을 나타내는 증서이다.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발행 기관에는 **만기에 원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생기므로 부채가 증가한다. 주식 발행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것과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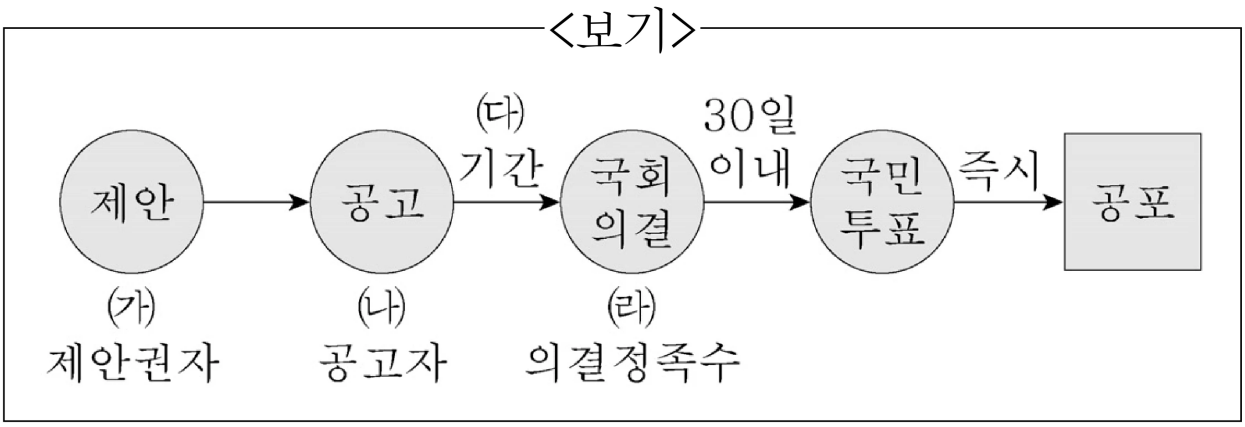
③ X: C인 주식뿐 아니라 **B인 채권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시세 차익은 금융상품을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서 얻는 이익이다. 채권도 만기 전에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고 가격이 변동하므로, 이자 수익 외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B와 달리 C는'을 'B와 C는 모두'로 고쳐야 한다.

④ O: 요구불 예금은 보통예금 등에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채권도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주식의 투자 수익은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이며, **주식 보유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A와 B는 '예', C는 '아니요'로 답하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NoteBase

문 14. <보기>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가)~(라)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① (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

② (나) 대통령

③ (다) 60일 이내

④ (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헌법 개정안의 제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재적 의원 과반수**이다.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헌법 개정안의 제안권자이다. 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따라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을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고쳐야 한다. 과반수는 절반을 넘는 수를 뜻한다.

② O: (나)는 제안된 헌법 개정안의 공고자이다. 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공고는 대통령이 한다.

③ O: (다)는 공고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기한이다.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과 국회의 의결 기한은 구별된다.

④ O: (라)는 국회의 헌법 개정안 의결에 필요한 찬성 요건이다. 헌법 제130조 제1항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찬성 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은 회의에 출석한 의원 수가 아니라 국회 재적 의원 수이다.

NoteBase

문 15. <보기>는 경제 체제 A와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보기>

질문	A	B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경제 체제와 관련이 있는가?	예	아니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가?	㉠	㉡
(가)	아니요	예

① A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에서 형평성을 더 강조한다.

② B보다 A에서 경제적 유인 체계를 더 중시한다.

③ ㉠에는 '아니요', ㉡에는 '예'가 들어간다.

④ (가)에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A는 시장 경제 체제이고, B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윤이나 소득을 얻으려는 동기가 경제 활동을 이끌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 체계**를 더 중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의 첫째 질문에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A는 시장 경제 체제, 인정하지 않는 B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 시장 경제 체제는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선택과 시장 가격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을 통해 자원을 배분한다.

① X: 시장 경제 체제인 A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더 강조한다. 경쟁과 이윤 추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분배의 형평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것은 계획 경제 체제인 B이다.

② O: A에서는 경제 활동의 성과가 자신의 이윤이나 소득으로 이어지므로, 더 생산하거나 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생긴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 추구를 경제 활동의 동력으로 삼는** 경제적 유인 체계는 B보다 A에서 더 중시된다.

③ X: 시장 경제 체제인 A는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므로 **㉠은 '예', ㉡은 '아니요'**이다. 계획 경제 체제인 B에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이 경제 활동을 통제한다.

④ X: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시장 가격을 통해 조정되어 자원이 배분되는 원리를 뜻한다. 이를 중시하는 것은 A이므로, 이 질문을 넣으면 A는 '예', B는 '아니요'가 되어 표와 반대이다. (가)에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가?'**처럼 A가 '아니요', B가 '예'로 답할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세금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고,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한다.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조세를 분류하면 ㉠ 간접세와 ㉡ 직접세로 나뉜다.

① ㉠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② ㉡은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③ ㉠이 ㉡보다 조세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하다.

④ ㉡이 ㉠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 직접세는 소득세처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 간접세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은 간접세, ㉡은 직접세이다. 두 조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의 일치 여부로 구분한다.

① X: ㉠은 간접세이므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지만, 소비자는 상품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것은 ㉡ 직접세이다.

② X: ㉡ 직접세는 소득세·재산세처럼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된다. 소비 지출에 주로 부과되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 간접세이다.

③ X: 일반적으로 조세에 대한 저항은 간접세보다 **직접세에서 더 강하다**. 직접세는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을 직접 납부하므로 부담을 뚜렷하게 인식한다. 간접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인식한다.

④ O: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간접세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직접세인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인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같은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저소득층은 소득 중 소비에 쓰는 비중이 대체로 높으므로, 이러한 간접세는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NoteBase

문 17. <보기>의 사례에 대한 「민법」 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 만 17세)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신형 스마트폰 판매자인 을(乙, 만 40세)과 고가의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甲)은 을(乙)과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아직 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① 갑(甲)과 을(乙)의 계약은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을(乙)은 갑(甲) 본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 을(乙)은 갑(甲)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매매 대금이 완납되는 시점부터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을은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갑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계약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갑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이고, 스마트폰 매매는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다(민법 제5조). 취소 전에는 유효하고,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② X: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갑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해야 한다. 을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효력을 확정할 것인지 물을 수 있다. 갑 본인에게 이러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은 갑이 성년자가 된 후이다(민법 제15조 제1항·제2항).

③ O: 을이 계약을 맺을 때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갑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계약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는 행위이다. 반대로 을이 계약 당시 갑의 미성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16조 제1항).

④ X: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민법 제563조). 갑과 을은 스마트폰을 사고팔기로 합의했으므로 이미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대금 지급은 성립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다.

NoteBase

문 18. <보기 1>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헌법재판소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특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舊) 「문화 예술 진흥법」의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보기 2>
ㄱ.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ㄴ. 국가는 문화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ㄷ.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해야 한다.
ㄹ. 의료,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문화시설 관람을 장려하고 국민이 문화를 누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이다. 평생교육 진흥과 문화의 보호·발전은 국민의 문화적 삶을 뒷받침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문화국가 원리는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문화의 보호·발전과 국민의 문화생활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보기 1>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기보다 문화 향유를 장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원리와 관련된다. 아래 O/X는 각 내용이 이 문항에서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다.

ㄱ. O: 평생교육은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계속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지적·문화적 성장을 돕는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진흥**은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헌법 제31조 제5항도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한다.

ㄴ. O: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문화국가 원리의 직접적인 실현**이다. 헌법 제9조는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도록 규정한다.

ㄷ. X: 균형 있는 경제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를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국가 원리**와 관련된다. 문화의 보호·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으로 분류할 내용은 아니다.

ㄹ. X: 의료·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교육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 보기는 문화적 성장보다 국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은 ㄱ과 ㄴ이므로,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아래의 표는 갑(甲)국과 을(乙)국이 X재 1개와 Y재 1개를 각각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단, 양국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고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며 양국이 보유한 노동자 수는 각각 100명이다.)

구분	갑(甲)국	을(乙)국
X재(1개)	4명	2명
Y재(1개)	5명	4명

① 갑(甲)국은 Y재를 최대 25개 생산할 수 있다.

② 갑(甲)국의 X재 1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5/4개이다.

③ 갑(甲)국은 X재에, 을(乙)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④ 을(乙)국은 X재 10개와 Y재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을국이 X재 10개를 생산하는 데는 20명, Y재 20개를 생산하는 데는 80명이 필요하다. 필요한 노동자가 **총 100명으로 보유 노동자 수와 같으므로** 두 재화를 해당 수량만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의 수치는 재화 1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이다. 각국의 노동자는 100명이며, 한 재화의 최대 생산량은 모든 노동자를 그 재화 생산에 투입했을 때의 수량이다. 기회비용은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수량이고, 비교우위는 같은 재화의 기회비용이 상대국보다 낮을 때 성립한다.

① X: 갑국은 Y재 1개를 생산하는 데 5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Y재의 최대 생산량은 $\frac{100}{5} = 20$개이다. **25개는 Y재가 아니라 X재의 최대 생산량**으로, X재 1개에 노동자 4명이 필요하므로 $\frac{100}{4} = 25$개를 생산할 수 있다.

② X: 갑국에서 X재 1개에 투입되는 노동자 4명은 Y재 생산에 투입하면 $\frac{4}{5}$개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Y재 4/5개**이다. 선지의 Y재 5/4개는 두 재화의 노동 투입 비율을 거꾸로 계산한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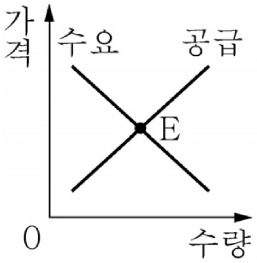
③ X: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Y재 $\frac{4}{5}$개, 을국이 Y재 $\frac{2}{4} = \frac{1}{2}$개이므로 을국이 더 낮다. Y재 1개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X재 $\frac{5}{4}$개, 을국이 X재 $\frac{4}{2} = 2$개이므로 갑국이 더 낮다. 따라서 **갑국은 Y재에, 을국은 X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④ O: 을국은 X재 1개에 2명, Y재 1개에 4명이 필요하다. X재 10개에 필요한 노동자는 $2 \times 10 = 20$명이고, Y재 20개에 필요한 노동자는 $4 \times 20 = 80$명이다. 두 재화에 필요한 노동자의 합이 $20 + 80 = 100$명으로 **보유 노동자 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X재 10개와 Y재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가)는 X재 시장의 상황을 나타낸다. <보기> (나)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X재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재와 Y재는 모두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따른다.)

<보기>

(가)	
(나)	• 수요의 변동 요인 : X재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Y재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 공급의 변동 요인 : 시설 설비의 첨단화로 인해 X재의 생산 기술이 향상되었다. (단, 수요 곡선의 변동 폭이 공급 곡선의 변동 폭보다 더 크다.)

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③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대체재 Y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 기술 향상으로 X재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수요 곡선의 변동 폭이 더 크므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두 변화가 모두 거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NoteBase

도식 해설

(가)의 그래프는 세로축이 가격, 가로축이 수량이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E가 처음의 균형점이다.

수요 변동: 대체재는 서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이다. Y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X재로 소비를 바꾸므로, 같은 X재 가격에서 X재를 사려는 양이 늘어난다. 따라서 X재의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공급 변동: 시설 설비의 첨단화로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X재 가격에서 판매하려는 양이 늘어나므로, X재의 **공급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균형 가격: 수요 증가만 일어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 증가만 일어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두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는 상대적인 변동 폭을 확인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수요 곡선의 변동 폭이 공급 곡선보다 더 크다**고 하였으므로, 처음의 균형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진다. 이 초과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려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균형 거래량: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는 각각 균형 거래량을 늘리는 요인이다. 두 곡선이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새로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결국 새 균형점은 E보다 오른쪽 위에 형성되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NoteBase